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41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3월 31일 (음력 3월 3일) 금요일

2012 여수엑스포 유치 실패 우려

민간 중앙유치위 구성안돼 외교활동 한 차례도 못해

2012년 여수엑스포 해외유치활동을 전담할 민간 차원의 중앙유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 또 다시 유치 실패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세계박람회 사무국(BIE)의 개최지 현지 실사가 내년 상반기로 다가왔지만 여수엑스포 유치 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쳐야 하는 중앙유치위는 구성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여수엑스포 유치활동 준비는 지난 2004년 11월 지방유치위 발족, 2005년 3월 해수부 유치기획단 정원 승인 및 같은 해 4월 여수유치위원회 출범 등 실무 및 지방차원 활동에 머물러 있다. 지난 14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이 또한 주요정책 심의 조정 및 행정지원총괄 수준에 그쳐 본격적인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득표 활동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해외활동은 2005년 8월 일본 아이치 박람회 한국관 설치를 통한 홍보가 전부였다.

2010년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 BIE 현지 실사(2002년 3월 26~27일) 2년 4개월 전인 1999년 11월 26일 정몽구 당시 현대·기아차 회장을 위원장으로 중앙유치위가 발족, 외교라인과 해외기업망을 풀가동해 전력투구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여 정부차원의 유치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정부는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 총수가 중앙유치위원장을 맡아 뛰어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삼성은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치중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이 2010년 엑스포 유치 때 위원장을 맡은 데다 최근 불거진 비자금사건 때문에 대외활동에 나서기 어려운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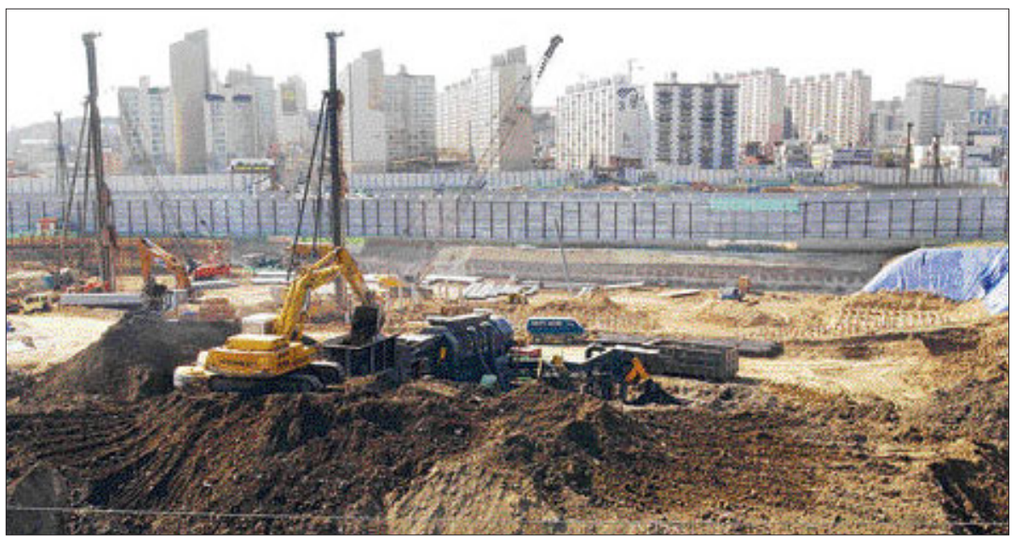
중앙유치위 구성 차질로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유치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나 모금도 할 수 없어 해외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2002년 당시 국가차원에서 2010년 엑스포 유치총력전을 전개했던 우리나라는 중국·러시아·멕시코·폴란드 등과 경합을 벌여 4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으나 결선투표에서 중국(상하이)에 34대 54로 뒤져 개최권 확보에 실패했다.

또 2010년 박람회 유치 실패의 근원으로 지목됐던 여수지역의 부족한 교통·관광 인프라는 최근'오션리조트특구''시티파크리조트 특구' 개발 및 목포~광양고속도로 개설, 국도 17호선 확장 계획 등으로 여건이 다소 개선됐지만 1년 앞으로 다가온 현지 실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박환기 전남도 엑스포지원관은 "여수지역의 도로교통·관광시설 확충계획으로 세계박람회 유치 여건이 이전보다 나아졌다. 중앙유치위를 빨리 발족시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세계박람회는 여수를 비롯해 모로코 탕헤르, 폴란드 브로츠와프 등이 개최의사를 밝혔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년 상반기 BIE의 현장실사를 거쳐 2007년 12월 BIE 회원국 투표로 개최지가 결정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30일 정부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를 골자로 한 3·30부동산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재건축아파트값 급등세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공사에 들어간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아파트 2단지 재건축현장.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8월부터 재건축 개발이익 최고 50% 환수

광주 3,600여세대 부과 대상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당 3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를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모든 단지에 적용돼 광주지역 일부 아파트를 비롯 전국 대부분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11면〉

또 내달 5일부터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기준에 소득을 감안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 조건이 첨부되면서 담보대출을 통한 봉급생활자들의 고가주택 매입이 매우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과율을 곱한 총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개발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도입한다.

광주지역의 경우 재건축 사업이 추진중인 서구 화정·쌍촌주공아파트와 남구 봉선동 장미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가 개발부담금의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화정주공 3천세대, 장미아파트 340세대, 쌍촌주공 300세대 등 총 3천640세대에 달한다. 또 염주주공도 재건축을 위한 사업추진에 나서는 등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대책을 둘러싼 파급효과를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기지역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때 금융권 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천만원이고 월 상환액이 167만원인 봉급생활자가 투기지역내 6억짜리 주택 구입시 받을 수 있는 3년 만기 담보대출액은 종전 2억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최경호기자 choice@

론스타 한국사무소 압수수색

스티븐 리 대표 체포영장…핵심인물 출국 금지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입과 탈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한국 사무소 등을 30일 전격 압수수색하고 핵심 인물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검사 3명 등 수사인력 60여명을 투입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빌딩 30층 론스타 한국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3면〉

검찰은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유회원 대표와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 정헌주 대표 등 론스타 핵심 관계자 5명의 자택 및 경기 파주군에 있는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 문서보관 창고도 이날 수색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론스타 코리아 스티븐 리 대표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조만간 범죄인 인도를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국내에 있는 론스타 관련 내외국인 10여명의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고 금명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대검 중수부는 그동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과 860만달러 외환도피 사건, 국세청이 고발한 147억원 탈세 등 3개 사건을 통합해 수사해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독도 주권훼손 용납 못한다"

정부, 日 고교 교과서 일본 땅 명기 철회 촉구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의 고교 교과서 제작 출판사에 '독도는 일본 땅'으로 명기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30일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고교용 지리역사 및 공민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기술을 한 것은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함께 역사를 은폐.왜곡하고 미화하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영토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일제가 과거 침략전쟁시 강탈했던 적이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미화시켜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오후 오시마 쇼타로(大島正太郎)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통상부로 불러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어떤 일본 정부의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어제 일본에서 발표된 교과서의 독도에 관한 기술내용이 우리정부의 독도에 관한 주권을 심히 훼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전달하기 위해 대사를 초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9일 발표한 2007년도 일본 고교 지리역사 및 공민교과서 검정신청본 55개를 분석한 결과 20개 교과서가 문부성이 제시한 검정의견에 따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기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07 수능 세부시행계획 7·8면

社告

제6회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4월3일~4월7일…퍼포먼스 등 행사 다채

광주일보사는 광주지방노동청(청장 이기권)과 공동으로 '제6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월3일~4월7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바뀐 노동법과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장에서는 고용평등과 관련한 영상물이 상영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용 CD도 나눠드립니다.

행사기간 중에는 시민들과 함께 고용평등 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퍼포먼스·퀴즈박스·페이스 페인팅 등 홍보 캠페인(4월6일 : 금남지하상가 분수대) ▲고용평등 정책설명회(4월7일 : 광주지방노동청 회의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념식 : 4월 3일(월) 오후 3시
■장 소 :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 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세미나실
■문 의 : 광주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062)220-7351

光州日報社·광주지방노동청

법무법인 설립인사

저희들은 이번에 공무 법무법인 로컴을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민·형사, 조세, 행정 등 일반 송무, 공정거래, 국제거래, M&A 등 기업법무, 지적재산권, 등기, 개인회생·소비자파산, 공증 등 모든 법률적 사무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 표 변호사 이근우 용응규
•구성원 변호사 양동학 손창환 심형섭 정재중
•소 속 변호사 이상현 김상우
•공인회계사 허재호

홈페이지 www.로컴.kr www.elawcom.co.kr

LAWCOM 공무 법무법인 로컴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8-33 로컴빌딩
대표전화 062) 236-0001 공증실 062) 234-6100